‘쇠고기 파문’ 인책 칼바람 분다

여권, 사태 악화·대응 실패 정부 책임론 제기

정운천 농림 경질 가능성…‘후폭풍’ 우려도

여권이 ‘쇠고기 파문’이 일단락되는 대로 관계자에 대한 인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쇠고기 수입 협상의 절차적 타당성을 떠나 이후 대처 과정에서 실수 등이 빚어지면서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책 범위를 놓고는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쇠고기 협상 주무장관 등을 포함해 과감한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또 일부에선 대대적 인책이 가져올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인책 범위를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서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이날 “쇠고기 파문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쇠고기 수입 협상이 끝난 뒤 결과를 정부가 제대로 알리지 못했고 인터넷 등에서 제기된 괴담에 대한 대응 타이밍도 놓쳐 문제를 키웠다”면서 “파문이 진정된 뒤 짚을 것은 짚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여당에서는 주무 장관인 정운천 농식품부장관의 경질 가능성을 조심스레 내놨다. 쇠고기 수입 협상 전반에 대한 대국민 설득 작업이 미진했다는 이유에서다.

한나라당 초선 의원은 “주무장관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채 야당의 공세에 밀리면서 여론이 더 악화됐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광우병 문제를 보면 아는 부서는 농식품부 밖에 없다”면서 “정책을 펼 때 사전에 국민이 알게 하고 국민의 뜻이 반영되고, 사후에 알리는 유용한 소통관계가 소홀히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질타했다.

말실수(?)를 한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책임론도 거론된다.

김 장관은 13일 “쇠고기 협상을 이끈 것은 외교통상부”라며 쇠고기 파문의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했다.

또 “지금까지 30개월도 안 되는 소를 먹는 줄 몰랐다. 사람들이 잔인해졌다. 소도 엄연한 생명인데 10년은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발언으로 불난 민심에 기름을 붓기도 했다.

그러나 주무장관 교체의 경우 협상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또 재직 기간이 짧아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이란 점에서 반대 목소리도 만만찮다.

여권 한 인사는 “야당에서 정운천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여당이 방패막이 되진 못할망정 앞장서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 앞서 티타임을 갖고 양건 국민권익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 참석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李대통령 “공무원, 국민에 정책 알릴 의무”

국민권익위 업무보고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정부 조직과 국민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면서 “모두가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돼야 하고 국민에게 정부 정책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책을 펼 때 사전에 국민이 알게하고 국민의 뜻이 반영되고, 또 사후에 알리는 유용한 소통관계가 좀 소홀히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직자는 국민과의 의사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며, 국민과 정부는 원활히 소통해야 한다”면서 “광우병 문제를 보면 아는 부서는 농림수산식품부 밖에 없고 다른 부서는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상식선에서도 정부 정책을 잘 모르는 만큼 각 부처가 하는 주요한 업무는 전 부처에 알릴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신제품을 만들 때 온 국민에게 어떤 방법으로 알려 기능이 어떻고 과거 제품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고 편리해 졌는지를 철저히 알린다”면서 “공직자도 국민에게 필요한 주요정책을 철저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선진사회와 일류국가를 만드는 데는 국민의 아픔과 고충, 억울함을 신속히 해결해줄 수 있는 정부적 기능이 있어야 한다”면서 “똑같이 불편한 제도를 갖고 계속 고충을 처리해 달라고 국민이 오게 되면 민원을 빨리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나 근본적인 것은 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민원처리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민원인에게 통보만 해 주면 된다는 자세보다는 누가 우편을 보냈고 어떤 부서가 어떤 답변을 했는지 끝까지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실무자가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민원중 50% 이상은 윗선에서 관심을 두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며 공직자들의 의식전환을 촉구했다.

한편 권익위는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불편 해소와 경제살리기를 위해 1만여건에 달하는 훈령, 예규, 고시 등 현행 행정규칙에 포함된 불합리한 규제를 전면 개선, 정비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범정부 통합민원처리시스템인 ‘국민신문고’를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과 연동시켜 민원이 많은 법령을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연합뉴스

민변, ‘美 쇠고기 협상’ 國調 청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미국산 쇠고기 협상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변은 14일 오전 국회 민원실에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기준 협상 경위 등 18개 사항에 대한 국정조사 청원서를 냈다고 밝혔다.

민변은 미국의 사료조치가 강화됐다는 이유로 30개월이 넘는 소에 대한 제한을 풀어준 경위와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했을 때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의 광우병 지위 분류를 변경할 때만 수입을 중단하도록 합의한 경위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농업부의 검사 아래 운영되는 미국의 모든 육류작업장에 대해 한국으로 수출될 쇠고기나 쇠고기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는데 합의한 근거와 경위, 수입 검역에서 우리측의 전수 검사를 불가능하도록 한 이유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미국산 쇠고기 검역 협상에서 30개월령의 제한을 폐지한 데 대한 안전성과 과학적 정당성, 졸속 협상 경위 등 전반의 사항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회에 청원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조사 청원서는 강기갑·임종인·최재천·이상민 의원이 추천했으며 국정의 특정사안에 대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국회가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조사를 시행토록 할 수 있다. /연합뉴스

정형근, 감사원장 교체 ‘쓴소리’

한나라당 정형근 최고위원이 14일 전윤철 감사원장의 사표를 수리키로 한 여권 방침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또 대통령제 폐해를 지적하면서 내각제 검토도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이 전 감사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위원장을 맡았다면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개인적 소견을 밝혔다.

그는 “전 감사원장의 경우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동의해 임명됐다”면서 “공직자의 자세 등으로 봤을 때 여야 모두 비교적 흠이 없는 무난한 사람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장의 정년은 70세로 내년 6월이면 정년 때문에 더 하고 싶어도 그만두는 자리”라면서 “굳이 감사원장을 전격 사퇴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도 전통을 갖는 성숙한 정치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다면 노무현 정권 때 임명된 사정기관 수장들이 몇 명 있는데, 어떤 자리는 유지하고 어떤 자리는 사퇴하는 이런 것도 맞지 않는다”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정 최고위원은 또 “대통령제는 많은 폐해를 갖고 있다. 친박(복당) 문제도 대통령제 경선이 갖고 온 여러 모순”이라면서 “이제는 대통령제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권이 바뀌면 무더기로 사람이 바뀌고, 인사의 기준이 캠프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인사 기준은 바뀌어야 한다”면서 “내각제를 깊이 생각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